

회사 체납에 노후연금 못 받아… 13만명 수급 문턱서 좌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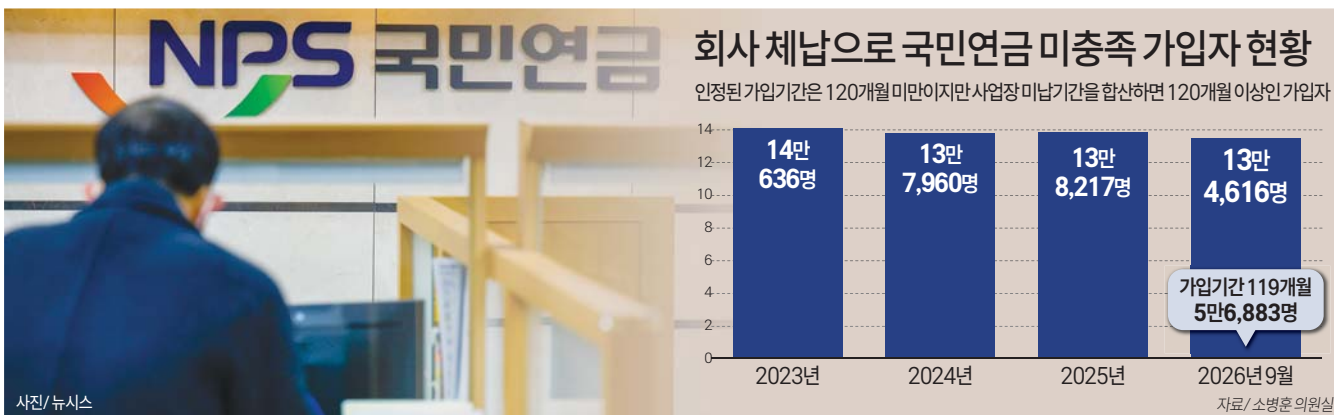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제 제기
회사 보험료 미납, 가입기간 미인정
체납 피해 이력 가입자 150만명 달해
근로자가 책임… 실질적 구제책 절실

회사가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정작 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해 노후 연금을 받을 자격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경기 광주시갑)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기준 인정된 가입기간은 10년(120개월)에 못 미치지만 회사가 납부하지 않은 기간까지 합치면 10년을 채울 수 있는 가입자가 13만4616명에 달했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노후에 매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회사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근로자가 실제 일한 기간이라도 가입기간으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자료를 보면, 인정된 가입기간이 119개월인 가입자가 5만6883명에



달했다. 회사의 미납 보험료가 납부돼 단 한 달만 더 인정되면 연금 수급에 필요한 10년을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이다. 회사 미납기간을 합산하면 10년을 채우는 가입자 가운데 60세 이상도 2만982명이나 됐다.

심지어 노령연금 대신 그동안 낸 보험료를 한꺼번에 돌려받는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 중에도 회사 미납기간을 합산하면 10년을 채울 수 있었던 사람이 2023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연도별 합계 2823명으로 확인됐다.

회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력이 남아 있는 가입자는 2026년 9월 기준 150만3427명으로 1인당 평균 약 7개월의 미

납기간이 남아 있었다.

더 큰 문제는 회사가 내지 않은 보험료 때문에 발생한 불이익을 근로자가 직접 돈을 내서 해결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고, 회사가 근로자의 월급에서 보험료를 공제해 함께 납부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회사가 보험료를 체납하면 근로자가 자신의 부담분을 직접 납부하더라도 해당 체납기간의 절반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체납기간 전체를 인정받으려면 회사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까지 근로자가 대신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월급에서 이미 보험료가 공제된 근로자라면 회사가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몫을 내고, 다시 회사 몫까지

부담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도 이러한 문제를 인정했다. 공단은 소병훈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에서 "사업주의 체납으로 급여에서 기여금을 공제했음에도 불이익을 받게 된 근로자의 구제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보험료 납부 없이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재정 부담과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놔다. 공단은 체납처분(압류) 등을 통해 연금보험료 체납분을 징수하고 있다. 근로자에게 체납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보험료가 미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다. 공단이 제출한 제도개선 검토자료의 주요 대책 역시

고액·상습 체납사업주의 인적사항 공개 기준을 현행 체납 1년 이상·2000만원 이상에서 체납 1년 이상·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었다.

체납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작 회사의 체납으로 가입기간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여전히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이에 대해 소병훈 의원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법적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는데,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 잘못 없는 근로자가 노후 연금까지 잃을 위험을 떠안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월급에서 보험료를 공제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근로자에게 다시 돈을 내라고 하는 구조를 그대로 뒤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근로자의 가입기간을 우선 인정하고 체납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을 포함해, 특히 연금 수급을 앞둔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구제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metro

병무청, 병역특례 점진적 폐지 공감… 시점은 ‘안갯속’

국회 국방위 병무청 국감

예술요원 기준 높이고 체육요원 개편
여성 징병·보충역 제도 개편도 쟁점

국회 국방위원회의 12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는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공정성과 개편 방향이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구체적인 개편 일정과 병무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병역특례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궁극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국방부 방침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전 병무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2026 아이치나고야아시아게임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군 면제' 관련 발언과 '전역모' 착용 사진 등을 언급하며 병역특례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 의원이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이행 사례를 들어 병역특례 제도 개선 방향을 묻자, 홍 청장은 "BTS 멤버 전원이 한 명도 빠짐없이 병역을 이행함으로써 병역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한다"고 답했다. 병역특례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병역특례 제도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폐지하겠다는)



국회 국방위원회의 12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는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공정성과 개편 방향이 도마에 올랐다. 사진은 홍소영(앞줄 가운데) 병무청장이 지난 9월4일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 호텔에서 열린 자원병역이행 모범병사 초청행사에서 참석 병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국방부의 의견과 동일하다"고 했다. 다만 폐지 목표 시점에 대해서는 국방개혁 기본 계획이 최종 검토 단계에 있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병무청은 예술요원의 국제 예술경연대회 입상 기준을 '2위 이상'에서 '1위'로 높이고, 국내 전통예술 경연대회는 부문을 통합해 대회별 편입 인원을 2~3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홍 청장은 체육요원 제도에 대해 "오는 11월 말 최종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를 기반으로 이해관계자의견 수렴, 국민 의견을 고려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

고 설명했다. 다만 "(체육요원) 제도를 갑자기 없앨 수는 없기에,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다"며 "제가 책임지고 내년쯤에는 합리적인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지만, 연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병역특례의 형평성 문제가 오랫동안 제기됐는데도 병무청의 대응이 늦었다고 질타했다. 성 의원은 2008년 국회에서도 관련 문제가 제기됐으며 "20년 가까이 이 문제가 테이블에 올라왔는데 그동안 무슨 일을 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병역특례 편입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한다는 점을 들어 "(병무청장이) 시행령을 조정하면 되는 것을 안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병력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양성 징병제'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203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한 병력자원 감소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청장은 여성도 징병될 경우 필요한 전투 역량을 갖추 수 있다고 보느냐는 천 의원의 질문에 동의했다.

천 의원은 현역 판정 대상 확대에 따른 군 전투력과 병력 관리 문제도 지적했다. 올해 8월 기준 현역 처분율이 86.7%, 보충역 처분율이 7.5%라는 점을 들며 과거 보충역이나 면제 판정을 받았을 인원이 현역으로 입대하면서 초급간부의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숫자는 충족된다고 해도 전투력에 있어서 바람직하냐"며 보충역 폐지가 군의 병력 관리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청장은 보충역 제도 폐지 시점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면서 "보충역 제도가 폐지되더라도 군에서 전투와 비전투 분야로 나눠 관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경수 기자 gws0325@

방미통위, 불법스팸 부당이익 환수 추진

안전한 미디어 이용환경 과제 제시
매출액의 최대 6% 과징금 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스팸으로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과징금 제도를 추진한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이같은 정책 방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안전한 디지털·미디어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4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목표는 방송의 공공성과 자율성 회복, 미디어 기본사회 구현, 산업 경쟁력 강화,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등이다.

불법스팸 전송에 대한 처벌은 최근 사업자 의무 조항을 강화한 내용이다. 방미통위는 이날 1일부터 관련법 개정안 시행으로 관련 사업자가 불법스팸 전송에 대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매출액의 최대 6%를 부과 받는다. 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불법스팸 전송자 또한 제재 대상이 된다.

통신시장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도 상향해 불공정행위를 강화한다. 최

근 방미통위는 통신 3사의 IPTV 가입 제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900만여원을 부과했다.

이 밖에 아동·청소년을 딥페이크 성범죄물로부터 보호하고, 인공지능(AI) 생성물 표시제와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령도 정비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통신·디지털 플랫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조민선 기자 msjo@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35.2%로 2주째 하락
민주당도 7%p 급락, 국힘에 역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2주 연속 하락해 35.2%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발표됐다. 같은 여론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35.5%, 국민의힘은 41.3%로 집계되면서 두 정당의 지지율이 역전됐다. 이 대통령 과민주당이 정책·민생 이슈에 집중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모양새다.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6~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2%포인트(p) 내린 35.2%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61.4%로 전주보다 1.6%p 올랐다. '잘 모름'은 3.4%였다.

지지율은 전남광주·전북, 30대, 20대 등에서 올랐다. 반면 나머지 지역과 여성, 40~70대에서 하락했고, 정치 성향으로는 보수·중도·진보층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또 지난 7~8일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도 민주당은 35.5%, 국민의힘은 41.3%로 집계됐다. 그 뒤로는 조국혁신당(6.3%), 개혁신당(2.8%), 진보당(1.2%) 순이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11%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7.0%p 떨어졌고, 국민의힘은 2.9%p 오르며 지지율이 역전됐다. 다만 양당 간 격차는 5.8%p로 오차범위(±3.1%p) 이내다.

이 같이 당정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가운데, 하락세를 멈출 뾰족한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이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민생·안전 문제를 적극 거론하고 있다.

/서예진 기자 syj@